

방역패스 첫날 QR 먹통...“밥 먹기 힘드네” 분통

시스템 오류에 식당·카페 곳곳 혼선...불편한 고객층은 불멘소리 수기방명록만 작성하고 학원선 방역패스 확인 않고 들여보내기도

“혼자 서빙하고 음식 만들고 백신접종 확인까지 하려니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는데, 하필 첫날 QR까지 먹통이라 답답해 죽겠습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광주 지역 식당·카페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점심 시간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몰리는 상황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COOV·전자예방접종증명)의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에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시민·업주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피씨방 ▲(실내)스포츠키팀(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방역패스’(백신패스)를 확인토록 했다. 접종 인증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QR인증 시스템의 접속 장애로 앱 접속을 시도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접속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점심 시간 이후에도 한참 동안 이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하루종일 ‘먹통 인증’ 게시글이 잇따랐고 QR코드를 만들려는 손님들로 입구가 가득찬 식당·카페 등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인증 없이 이용이 제한되는 식당·카페 업주는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어 부랴부랴 서랍에 넣어뒀던 수기 명부를 다시 꺼내놓는가 하면, 방역패스나 QR 인증 없이 손님을 받기도 했다.

아예 방역패스 시행 첫 날임에도, 별일 없다는 듯 수기 방명록만 비치해놓고 손님을 받는 식당·카페도 눈에 띄었다.

점심시간에 둘러본 광주시 동구 일부 식당 업주들은 ‘백신접종 확인 하느냐’고 묻는 손님에게 “그냥 쓰고 들어오세요”라며 안내하기도 했다. 다른 식당도 백신 접종 확인 없이 QR인증, 안심플안 요

청하고 손님을 맞았다. 점심시간에 몰린 손님들에게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한 업소는 많지 않았다.

오후 1시께 동구 서석동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 3명이 들어가자 “명부 작성이나 안심 콜 해주세요”라고 안내할 뿐 다른 확인 절차는 없었다. 비슷한 시간 동구의 한 학원도 수강생들에게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자영업자들은 울화통을 터트렸다.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0)씨는 “방역패스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확인하려면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힘들어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을 줄인지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백신확인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나”며 한숨을 쉬었다.

문행우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부분 사업장이 방역패스를 지키려고 하지만 홀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막대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백신 맞았다’며 역정을 낸다”고 하소연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도 방역패스 문턱에서 불편을 겪었다. QR 인증은 익숙한데 백신 접종 확인까지 받는 절차는 낯설기만 해 “이용하기가 꺼려진다”는 불멘소리로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까지 광주지역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률은 각각 83.2%, 80.5%로, 17만2612명(12%)이 추가 접종을 마쳤다.

전남의 경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86.2%, 2차 접종률은 83.7%, 추가 접종은 전남 인구의 17.2%가 끝났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방역패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거처럼 강화하고 공공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을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죄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

결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의견서를 보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정신적 질환을 인정할 유사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들이 방역 패스 'QR' 코드를 찍고 있다. 점심 시간대를 전후로 백신 접종 확인 서비스오류가 발생하면서 업소별로 방역 패스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혼선을 빚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또...여수산단 화학공장 화재 3명 사망

원료탱크 폭발하며 근로자 참변 끊이지않는 사고에 주민들 불안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여수산단의 경우 각종 최근 5년 간 29건의 화재가 발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산단에 위치한 화학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재난합동방재센터를 갖추고 매년 안전 점검을 해오는 상황인데도 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

화학제품 제조공장인 A산업 원료탱크가 폭발, 불이 났다.

이날 사고로 원료탱크 주변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A(70)씨와 B(64)씨, C(67)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폭발의 충격으로 인접한 공장에서 발견됐고 C씨도 소방당국의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7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휘발유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저장해 놓은 탱크에서 폭발과 불꽃이 발생,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나자 인접한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 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진화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간 여수산단에서는 2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 사고가 난 A산업에서는 지난 2004년에 비슷한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단 내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커진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10명에 이른다. 이같은 점 때문에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수산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경찰청은 일단 이일산업 관계자와 당시 작업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반신마비 환자 안전 소홀 부상...재활센터 운영자 벌금형

편마비(반신마비) 증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재활센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외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4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센터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해 홀로 4m 높이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재활운동을 하던 B씨가 떨어져 흉추 파열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다리 밑에 2.5cm의 매트 깔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 운동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해당 운동센터가 전문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1대 1 개별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운영 방침에 자율운동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편마비 증상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지켜보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등 관리를 하지 않았고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도 충격을 흡수할 정도의 충분한 두께로 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